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담당 :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
날 짜 2019. 2. 18. (총 5 쪽)

보도자료

‘국회를 열어라’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거쳐 국회 앞까지

1. 취지와 목적

-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임.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과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 이날 행사에는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과 각 단체 임원·활동가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함.

- 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 및 기자회견

- 시민행진
 - 일시 및 장소 : 2019. 02. 18.(월) 오전 8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집결
 - 행진 코스 : 자유한국당사 출발(8:10)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 자유한국당 규탄
 - 발언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규탄
 -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국회 앞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02. 18.(월)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 순서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처장
- 참가자 약 100명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 붙임 : 기자회견문

국회를 열어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병목지점이다.

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히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2019. 02. 18.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

<구호>

국회를 열어 3대 개혁입법 처리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비례제 도입하라
순수정보기관으로 국정원 개혁하라
검찰 개혁, 부패방지 공수처 설치하라